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간 선택적 자유화’를 중심으로 -

A Spatial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n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s: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 and Malaysia

박배균*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의 맥락적 의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서,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이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 의존적 특성에 의해 규정받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대회랑’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제도적·정치적 유산과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프로젝트 사이에 발생하는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어떻게 ‘공간 선택적 자유화(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를 통해 공간적으로 매개되는지를 탐구한다. 이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는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적 과정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신자유주의, 공간 선택적 자유화, 발전주의 국가, 경로 의존성, 한국, 말레이시아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조교수(geopbg@snu.ac.kr)

1. 서론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발전주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많은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졌다. 하지만,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들어 —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 국가-시장 관계와 관련하여 국가의 성격과 형태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동아시아에서 국가 성격의 변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입장 중의 하나는, 이를 ‘신자유주의적 변화’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장하준(1998)은 동아시아에서 발전주의 국가의 소멸을 강조하면서, 발전주의 국가가 신자유주의 국가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피리(Pirie, 2005: 26)는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높은 강도로, “한국의 국가가 단지 정책을 변형하거나 몇몇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확실하게 신자유주의적 조절의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필자는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가 국가주도적 발전주의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는 식의 이러한 극단적 주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자 한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기존 발전모델과 조절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하에서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정책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관련하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형성되어 왔던 제도적·조절적·담론적 프레임들은 동

아시아 국가들의 재편과정 속에서 여전히 관성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자유화와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관료들이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고, 이러한 관료들의 주도적 역할은 많은 경우 시장지향적 개혁이 국가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발전주의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이를 ‘신자유주의’로 부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글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복잡하고 흥미한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 속에 뿌리내려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개념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 의존성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적 맥락하에서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은 이러한 신자유주의화의 실제적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이 최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재편의 공간적 차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가 풍미하고 있지만, 그것의 공간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에 집중한다. 먼저, 신자유주의화의 맥락적으로 뿌리내려져 있고 경로 의존적인 과정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표출되는가? 둘째, 공간은 ‘실제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실천(actually existing neoliberal practices)’을 만들어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경험적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과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대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 사업에 초점을 두어, 발전주의 국가의 조절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제도적·정치적·공간적 지형/조직들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프로젝트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어떻게

‘공간 선택적 자유화(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적으로 매개되고 조정되는지 탐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화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공간 선택적 자유화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지배적인 방식은 시장은 모든 것에 우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어떠한 일관되고 단일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에 대해 도전하면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들의 맥락특수적이고 경로 의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에 중점을 두면서, 브레너와 테오도어(Brenner and Theodore, 2002)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사실은 기존의 제도적 틀, 정책적 레짐, 조절적 실천, 정치적 투쟁의 관성적 힘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적이고 지역적 차원의 맥락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재구조화 프로젝트의 맥락적으로 뿌리내려져 있는 성격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조절적 지형과 새로이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재구조화 프로젝트 사이에 나타나는 경로 의존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의해 추동된 최근의 변화를 어떠한 완결된 정치적 레짐, 이데올로기적 형태, 그리고 조절적 틀이 완전히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시장지향적인 사회-공간적 변화가 나름의 내적인 모순 속에서 역사적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나타나는 양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자유방임적인

탈규제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가 제도가 더욱 더 확장적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수반한다(Tickell and Peck, 2003).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은 국가 조절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 과정인데, 이는 국가의 권력이 시장적 규율을 모순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재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을 이처럼 국가의 재조절적 과정으로 인식할 경우,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재조절화 과정의 공간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의 축적과 그와 관련된 조절의 과정은 항상 영역적이고 장소기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방화(glocalization)',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등장 등 도시 및 지역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적 표현의 예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도시 및 지역 거버넌스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공간성의 등장을 단지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 재편의 필연적 결과물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브레너(Brenner, 2003)가 지적하였듯이, 신자유주의의 공간성은 신자유주의화로 향하는 변화의 와중에서 국가 제도들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전략적 상호작용들과 사회·정치적 갈등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적 표현이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관련된 여러 비공간적 과정들 —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과정들 — 의 수동적인 결과물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간은 신자유주의화되는 과정에는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중재, 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력의 공간성에 대한 푸코의 주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원형감옥에 대한 연구에서 푸코는 건축적 디자인, 공간의 미시적 조직화, 물리적 배열 등과 같은 공간적 기술들이 개인들이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 통제, 조절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권력 메커니즘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Foucault, 1977). 이러한 공간적 기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전술,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섉(Sack)이 '영역성(territoriality)'이라고 명명한 것에 관심을 둔다. 그는 영역성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지리적 범위를 구획한 다음 그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을 통해 사람, 대상, 관계 등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로 정의한다(Sack, 1983). 즉, 이 영역성이라는 개념은 지리/공간적 구획화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배제 및 포섭의 과정을 통해, 정치·사회적 과정을 조절하고,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필자는 '영역적' 기술이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조절 시스템의 제도적 형태와 공간적 조직이 경제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힘들과 충돌할 경우, 영역적 기술—특히, 여기서는 필자가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전략이라고 명명한 기술—이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하고 중재하는 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전국국가적인 수준에서 급격한 속도로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이룩하려는 시도들이 기존 조절 시스템의 제도/공간적 틀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회 세력들로부터의 저항 때문에 실현하기 쉽지 않다고 보일 때, 국가나 지배 엘리트는 보다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조절 메커니즘의 적용을 특정한 선별된 지역에 한정하는 '공간 선택적 자유화'의 기술을 이용하여, 구(舊)조절적 틀의 방어자들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신봉자들 사이를 정치적으로 중재하려 시도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규제 특구',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과 같은 이름을 지닌 채, 국토 공간의 다른 부분과는 상이한 규제와 조절의 메커니즘이 허용되는 특별한 구역들이 건설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을 이러한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전략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2)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공간 선택적 자유화

최근 이러한 공간 선택적 자유화는 몇몇 동아시아 국가에서 중요한

공간개발의 한 경향이다. 예를 들어, 지난 10여 년간 일본,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은 ‘구조개혁 특구(Special Zone for Structural Reform)’(일본),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한국),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중국), ‘멀티미디어 대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말레이시아) 등으로 불리는 특별 지구들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국가 간에 어느 정도 차별성은 존재하지만,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는데, 그것은 이들 특별 지역들 내에 보다 자유화된 규제 틀을 적용하여 국내·국제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간적 경향을 ‘공간 선택적 자유화’의 견지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구 개발의 경향은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형성된 제도적, 조절적 틀을 유지하려는 세력들과 새로이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꾀하는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공간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들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게다가 매우 강한 민족주의/국가주의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자본과 노동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그 결과로 국가 경계를 중심으로 영역적으로 폐쇄, 보호되는 조절의 공간을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영역적으로 폐쇄된 조절의 공간 내에서 이들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들은 사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조절을 통해 자본과 노동에 대한 매우 집약적인 동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는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이후로 보다 많은 개방을 요구하는 내·외적 세력들에 의해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이러한 배타적인 영역성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보다 자유화하라는 내외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또한 신자유주의적 주장이 점차 지배적인 담론이 되면서,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료들은 조절의 제도와 지형을 보다 자유화되

고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점차 더 적극적으로 변화였다. 이처럼 민족/국가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것에서 보다 자유화 지향적인 것으로 국가 관료들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국가주도적인 신자유주의화가 추진되었는데, 필자는 이를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는 이들 동아시아 국가에서 지난 20~30년의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발전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동아시아 국가 관료들이 스스로 국가에 대한 시장의 우위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화에 앞장서는 것은, 발전주의의 강한 관성과 신자유주의 담론의 영향 속에서, 이 국가 관료들이 자유화와 시장지향적 개혁이 세계화되는 시대에 국가 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국가주도적 신자유주의화는 다양한 사회세력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기존 발전주의 국가의 조절적 틀에 의해 혜택을 받았던 — 혹은 최소한 그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성장해 온 — 세력들은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 산업정책의 보호 아래 성장해 온 기업들과 이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기존 조절 체제의 열렬한 수호자가 될 가능성이 컸다. 또한 일부 국가 관료들도 자신들 권한과 권위의 축소를 우려하여 급격한 자유화에 부정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발전주의 국가가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에 의해 수립한 분배적 정책에 의해 혜택을 받아온 세력들(예: 한국과 일본의 농부들, 말레이시아의 말레이계) 또한 이러한 분배적 정책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자유화 정책에 저항하였다.

자유화에 대한 이러한 장벽과 저항의 존재는 이들 동아시아 국가에서 완전한 규모의 급격한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러한 여건하에서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 중의 하나는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다 자유화된 조절적 틀과 제도의 적용을 몇몇 선별된 특별 지역에 영역적으로 국한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저항을 보다 쉽게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간 선택적 자유화는 발전주의 국가 이래로 건설, 유지되어 온 기존 조절적 틀의 수호자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주창자들이 공간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배경: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대회랑’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10여 년 간 공간 선택적 자유화의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말레이시아에서는 ‘멀티미디어 대회랑’이라고 불리는 특별 구역을 지정하여 막대한 공공 투자를 통해 자본과 첨단기술의 국제적인 허브로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차별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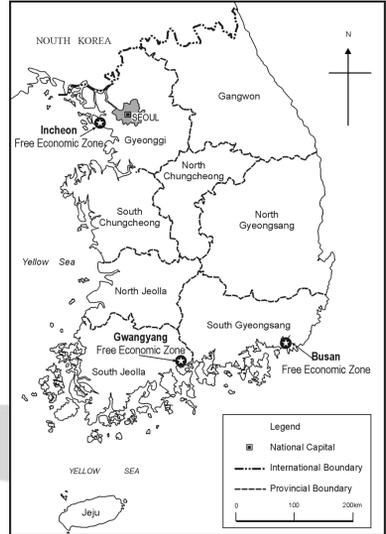
한국은 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을 입법하여, 한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외국 기업들에 특별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3년 9월, 한국 정부는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②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③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그림 1>).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들 특별 구역 내에서의 기업 활동에 한해 세금감면,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보다 유연한 노동조절의 허용 등 보다 자유화된 조절의 룰이 적용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1996년부터 ‘멀티미디어 대회랑’이라 불리는 특별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멀티미디어 대회랑’ 지역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가로 15km, 세로 50km에 해당되는 구역이다(<그림 2>). 이 대회랑 지역의 중앙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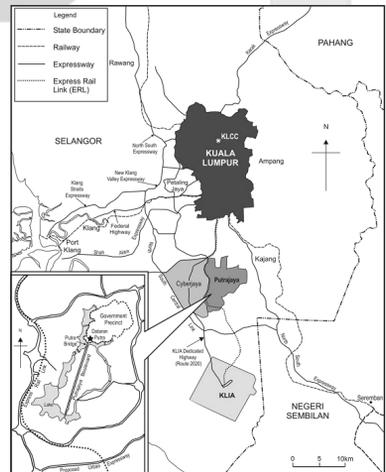
는 '푸트라자야(Putrajaya)'와 '사이버자야(Cyberjaya)'라고 불리는 두 개의 인공적으로 창조된 인텔리전트 도시가 개발되었다.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로 건설되었고, 사이버자야는 외국의 정보통신 관련 첨단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테크노폴리스로 건설되었다. 이 대회랑 지역의 북쪽 끝에는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Kuala Lumpur City Center)'라는 고층의 쇼펍빌딩이 건설되었고, 남쪽 끝에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이 건설되어 1998년에 문을 열었다(Bunnell, 2002a).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멀티미디어 대회랑'을 동남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건설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필요한 각종 허부구조 시설을 건설하려고 막대한 양의 공공 투자를 단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정부통신 관련 첨단 기업들이 이 대회랑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특별 지역에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세금 감면,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왜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 대답은 이들 프로젝트들이 세계화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그림 1>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그림 2>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대회랑 지역



합리적 대응이라고 설명하는 것일 것이다. 즉, 경제의 세계화를 계기로 제조업 지향적인 경제가 점차로 서비스나 기술지향적인 경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 첨단 기술, 창의적 노동에 대한 글로벌 허브를 국가의 영토 내에 건설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견지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특구 개발 프로젝트들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류의 경제적 합리성이 어느 정도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이 이들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습에 의해 제기된 국가에 대한 ‘전략 관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Jessop, 1990), 국가의 정책결정은 관료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힘과 세력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 충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실제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필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특별 구역 개발 프로젝트가 어떠한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화의 과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과정과 협상의 결과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전에 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형성된 제도적·공간적 틀을 지키려는 세력과 자유화와 개방을 주장하는 세력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공간적으로 매개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전략의 결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와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대회랑 프로젝트를 비교함으로써 ① 어떠한 사회-정치적 과정을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났는지, ② 기존의 조절적 틀의 수호자들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추종자들 사이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어떻게 공간 선택적 자유화를 통해 공간적으로 중재되었는지,

③ 공간 선택적 자유화에 기인한 새로운 공간 프로젝트와 기존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4. 한국에서의 공간 선택적 자유화: 경제자유구역의 건설

1) 한국 발전국가의 조절적 특징

1990년대 이전까지의 한국의 조절 양식은 '발전주의 국가'가 주도한 조절적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험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채택된 축적 전략은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인 동원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먼저, 한국 국가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금융 조절의 시스템과 민족주의적인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의 재벌들과 성장 동맹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집약적인 자본의 동원이 가능하였다(Park, 1998). 이와 더불어, 국가는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통해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를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억압적인 노동 조절의 체계를 구축하여, 집약적인 노동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Park, 2001).

2) 자유화를 위한 압력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이러한 조절의 양식은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한국 정부가 권위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정책 지향에서 벗어나,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유화된 정책적 지향을 갖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Park, 2003). 권위주의적인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국내적인 도전은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비롯되었는데, 먼저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포괄하는 사회운동 세력들은 정치적 권위주의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국가 주도 산업화의 결과로 성장한 재벌을 필두로 한 국내 기업 집단들은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부적인 도전에 의해 국가와 재벌 사이에 형성된 성장연합은 약화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집약적인 동원은 점차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적인 압력과 더불어 경제 자유화를 요구하는 국외적인 요구도 증가하였다. 레이건 행정부하의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에게 무역 장벽을 줄여 미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에서 보다 쉽게 그 나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Bishop, 1997: 109). 또한, 새롭게 체결된 GATT 협정은 회원국들이 그들의 시장을 좀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국내, 국외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압력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유화를 향한 좀 더 강력하고 급진적인 변화는 1990년대 말에 일어났다. 1997년의 금융위기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이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경제 회생을 위한 IMF의 계획은 금융 시스템, 기업 지배구조, 해외직업투자 이 세 부분에서의 정책적 개혁에 초점을 두었는데, IMF는 한국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대신에 이들 세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전의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 지향을 보다 자유화되고 시장지향적인 것으로 대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많은 자유화를 요구하는 국내적인 목소리도 금융 위기 이후에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정경유착 혹은 국가와 재벌 사이의 밀접한 연관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었던 기존의 조절 체계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의 결과로 한국에서 자유화는 급

격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3) 신자유주의화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공간 선택적 자유화

1990년대 이래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 운동 세력들의 비판이 거세지만, 필자는 한국 정부의 자유화 및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기존의 발전주의적 조절 시스템의 관성으로 인해, 자유화와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사회·정치적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장벽들로 인해 기존의 조절 시스템의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기존 조절의 체계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혹은 그 조절의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몇몇 사회적 세력들은 완전한 자유화와 탈규제화에 일정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재벌들은 공식적으로는 친시장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가 국내 기업과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시장주의를 설파하지만, 특정 산업과 기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담론을 동원하여 국가가 여전히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관료들의 태도도 매우 복잡하고 이중적이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관료 집단들은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적극 설파하고 있고, 이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료 집단들이 이전부터 내려온 경제적 민족주의의 담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 자본에 국내 산업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상당수의 관료들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발전

주의 국가 시절의 보호주의 담론의 영향하에서 경로 의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국가의 억압적 노동 조절의 환경 속에서 전투적인 투쟁을 통해 성장해 온 노동운동 세력들 또한 자유화, 특히 노동 조절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이래로 노동조합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일련의 노동 관련 개혁 조치들과 관련하여 국가 및 자본에 매우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일련의 시장지향적인 개혁의 조치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자유화에 대한 이러한 반대와 저항의 결과로 기업 활동과 노동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과 규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게 되었고, 이는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서 자유화가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위기 이후로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중시하게 된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외국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보다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장애들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의 탈규제화와 자유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 정부가 경제특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보다 과감하고 폭넓은 규제 완화와 자유화 조치들을 경제특구라고 지칭된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는 한국 정부가 전국적 차원의 급진적 자유화 조치보다는 더 쉽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전략을 채택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특구 아이디어의 주도자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2002년에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한다.

우리는 정치적·사회적 장벽 때문에 전 국토를 경제특구로 만들 수는 없

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경제특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의 과정을 통해 경제특구의 경계가 전국을 덮을 정도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시다(Korea Herald, 2002).

달리 말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자유도시 등과 같은 경제특구를 개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일정 정도는 신자유주의 주창 세력과 그에 대한 반대 세력 간에 벌어진 정치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그것의 공간적 절충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4) 신·구 공간 조절 프로젝트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그런데 이 공간 선택적 자유화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발전국가적 조절의 공간성과는 상충되는 지향 및 효과를 지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들 신·구 공간 조절의 프로젝트들은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이래로 한국 정부의 지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 산업단지 건설과 수도권 산업 활동 입지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의 분산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발전주의 국가가 취한 이러한 공간적 전략은 국가 축적 전략의 공간적 선택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국가가 자신의 조절적 역할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노력의 결과였다. 실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은 보다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그 공간적 선택성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의 증대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인구와 경제활동의 분산을 야기하고, 지방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분산화 시책들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역 격차의 문제에 정치적으로 신경을 쓰게 된 것이 단지 지역 격차가 심화된 물질적 조건 때문만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정치 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역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 정치적 조건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독재 대 민주화’라는 이념적 구분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균열 구조가 1960년대 중반 이후로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적 구분에 바탕을 둔 영역화된 균열구조와 결합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개발, 지역적 이해, 지역 격차 등의 문제가 계급 문제, 사회 계층적 격차 등과 같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분산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지역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분산화 정책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분산화 정책이 1990년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정책의 중요한 정책적 기조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¹⁾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한 경제특구 정책은 그것이 지닌 독특한 공간적 선택성 때문에, 그간 한국 정부가 30여 년 이상 유지해 왔던 분산화 정책과 갈등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2002년 4월에 제시한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원안에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국내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는 인천이 경제특구의 유일한 후보지로 고려되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조절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1)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는 각종 제도와 법규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비판들,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갈등이나, 행정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각종 논란들, 또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증설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정치들은 이러한 것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 최소한 참여정부에서까지는 — 수도권의 개발을 규제하여 지방으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려는 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의 집중은 더 심화되어 기존의 분산화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안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들은 인천에만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니, 수도권 지역 바깥에 몇 개의 경제특구를 더 건설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수도권 지역 바깥에 건설된 경제특구가 과연 지식·자본·노동의 국제적 흐름의 허브로서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였지만, 고도로 영역화된 한국 정치의 상황 속에서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고는 경제특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힘들었다. 앞서서도 논하였지만, 1970년대 이래로 한국 정당 정치에서 기본적인 지지와 동원의 자원은 '지역'이었다. 주요 정당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자신들에 대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정당들은 지역으로부터의 요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정부에 수도권 바깥 지역에 몇 개의 특구를 더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계획안에는 인천 외에 부산과 광양이 경제특구의 후보지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 안은 2003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이 세 지역에 경제특구가 건설되고 있다(<그림 1> 참조).

5. 말레이시아에서 공간 선택적 자유화: '멀티미디어 대화랑' 건설 프로젝트

1) 말레이시아의 '탈식민주의적(post-colonial)' 발전

말레이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조절적 틀은 기본적으로 2가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국가주도 산업화이고, 다른 하나는 인종 기반적 분배 정책이다. 이러한 조절의 체제가 성립된 것은 영국에 의해 수립된 식민지적 노동 분업의 관성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탈 식민주의적 상황에서 형성된 말레이시아 국가의 성격과 깊이 연관된다.

영국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형성된 식민지 경제는 인종-민족적 차별화와 연관된 특정한 양식의 사회-공간적 분화를 촉진시켰다. 말레이시아 사회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면서, 3개의 대표적인 인종집단으로 구성되게 되었는데, 이들은 말레이계와 인도계, 중국계였다.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계들은 대부분 ‘캄퐁(Kampung)’이라고 불리는 촌락 지역의 부락에 거주하면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 발달한 플랜테이션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 집단 이주된 인도계들이 플랜테이션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하였다. 중국계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규모 플랜테이션과 주식 등을 채취하는 광산업이 상업적으로 발달하여 관련 노동력과 상업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광산업과 관련 상업활동에 종사하면서 광산이 발달한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이들 광산지역들은 광업이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 급속한 상업적 발달을 경험하면서 말레이시아 도시발달의 결절지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영국 식민지 시기의 인종 간 경제적·지리적 분화와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 발달의 결과, 중국계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말레이계와 인도계는 대부분 촌락지역에 거주하는 인종 간 공간적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광산지역의 상업적 발달과 함께 많은 중국계 주민들 또한 상업적 성공을 경험하면서, 말레이계나 인도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 결과로 부유한 중국계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말레이와 인도계라는 분화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인종집단 간 특성의 차이는 이후 말레이시아가 근대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unnell, 2004).

인종집단 간 경제적·지리적 분화로 말미암아, 이들 세 집단은 각자 상

이한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말레이시아의 탈 식민화 과정과 국가 공동체 형성 과정은 어느 인종 집단이 새로 만들어 지는 독립 국가의 지배권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Chin, 2000: 1041). 하지만 인종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말레이계의 영향력이 다른 인종 집단들보다 더 컸고, 이들 말레이계는 인종 집단들 간의 동등한 권한을 제도화하려 했던 영국의 '말레이 연합(a Malay Union)' 건설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말레이계 인종 집단들에게 시민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말레이계의 정치적 지배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타협안(Bargain of '57')이 여러 인종집단들 사이에 합의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립 직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국가 통치체제는 아주 미세한 변화만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 독립 국가의 통치 엘리트들은 자본가들에 대해 자유방임적 태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자본 축적의 과정과 성격은 식민지 시기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Chin, 2000: 1042). 그런데 자본가 집단이란 것이 대부분 유럽의 거대한 무역회사들과 규모는 작지만 급속히 그 숫자를 늘려가는 중국계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 결과 말레이계가 정치적으로는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인종 집단 간의 물질적 부의 격차, 특히 중국계와 다른 집단들 간의 격차는 더욱더 늘어났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인종 집단들 간의 갈등과 긴장은 고조되었고, 1960년대 말에는 그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 1969년 5월 마침내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 지역에서 인종 폭동이 일어났다. 쿠알라룸푸르, 말라카, 페낭, 메락, 케다 등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이 폭동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0여 명이 숨지고 9,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5·13 사태'라고 불리는 이 폭동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종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말레이시아를 제대로 된 국가 공동체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정치 지도자들이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전까지는 인종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특정 인종집단의 편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이 5·18 사태는 국가의 질서와 인종 간 하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국가의 하모니를 깨치려 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단호하게 억누를 수 있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국가에게 제공하였다 (Bunnell, 2004).

2) 발전주의 국가의 등장

이런 상황 속에서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1970년대 초반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이라 불리는 정책을 새로이 추진하면서, 이전까지 유지해 왔던 무개입주의를 철폐하고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신경제정책’의 주목적은 빈곤을 없애고 사회의 지리적·인종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 특정 인종을 특정의 경제활동이나 도시, 농촌과 같은 지리적 위치에 결부시키는 것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Cleary and Shaw, 1994; Chin, 2000: 1042). 이를 위해 ‘신경제정책’은 특히 말레이 집단이 중국인들과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지위에 올라오도록 하기 위한 말레이계 우대 정책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 말레이계 우대 정책 아래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의 부가 비말레이계 집단에서 말레이계로 이전되고, 또한 말레이계의 기업과 전문직의 중산층이 창출되게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가의 개입주의적 태도가 인종 기반의 분배 정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통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81년 6월 마하티르가 말레이시아의 수상으로 선출되고 난 후 강하게 나타났는데, 마하티르는 말레이 민족주의를 경제 발전의 문제와 적극 결합시키면

서 국가 경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Bunnell, 2004; Chin, 2000). 특히 마하티르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과 근대화의 사례들로부터 배우자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산업적으로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다(Bunnell, 2004: 47). 이 동방정책의 영향은 경제 및 산업 활동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말레이시아 중공업 회사(Heavy Industries Corporation of Malaysia)'라는 국영 기업을 설립하여 수상 직속 관할하에 두고 중공업의 육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일본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말레이시아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신자유주의화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공간 선택적 자유화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말레이시아의 국가 개입주의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회·경제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어느 정도 자유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발생한 상품과 석유 가격의 국제적인 하락과 그로 인한 말레이시아 경제의 침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와 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부터 어느 정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Chin, 2000: 1044). 사실 자본 축적을 더 우선시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전주의는 인종 기반의 분배적 정책과 갈등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1980년대 중반과 같이 경제가 침체하고 있을 경우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자유화의 압력 외에,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저노믹스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의 시장 지향적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도 1980년대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자유화의 압력과 국가 개입주의에 대한 다양한 도전 속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글로벌하고 지역적 차원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자유화 정책들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하부구조 건설 사업과 신규 하부 구조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 국가 소유 기업들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 자유화, 관세 축소 등과 같은 정책들이 1985년의 플라자 협약 이후 동남아로 밀려들어오는 해외 자본을 말레이시아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국가 개입의 축소는 국가 주도 산업화와 관련하여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말레이시아 발전 국가 모델의 다른 한 축이었던 인종 기반적 분배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국가의 철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적 담론의 영향하에서 마하티르는 말레이계 인구들이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보호와 특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는 1986년의 경제 침체기에 공표된 일련의 공공 부문에서의 정부 지원 감소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경제 세계화는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비말레이계(특히 중국계) 인구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축해 온 초국적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여주었고,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계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Bunnell, 2004: 51). 사실 말레이시아가 초국적 자본에 대해 가지는 매력은 단지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만 아니라, 중국계 기업가와 경영진 계층이 말레이시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비말레이계 인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초국적 연계망의 경제적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4) 신자유주의의 정치와 공간 선택적 자유화

이와 같이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려는 시도는 자유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 비록 자유화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정치적 운동이 한국에 비해 훨씬 더 조용하고 덜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나타났지만 — 순조

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화에 대한 저항은 주로 기존 조절 체계로부터 — 특히 '신경제정책'의 개입주의적 국가 정책에 의해 — 보호와 혜택을 받아온 말레이계 인구와 엘리트 말레이 기업집단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긴장적 국면은 1987년 말레이시아의 집권 여당이었던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이 두 개의 분파로 내부 분열되는 것으로 표출되었는데, 한 분파는 기존 '신경제정책'을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기를 주장하였고, 다른 한 분파는 '신경제정책'을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자유화된 정책으로 대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Bunnell, 2004: 50).²⁾ 즉, 경제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내외적 압력과 지배 세력의 정치적 기반인 말레이계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 사이의 긴장이 표출되어 집권 세력의 내부적 분열을 야기한 것이었다.

집권 세력의 내부적 분열이 어떤 과국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두 상이한 분파들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집권 여당의 해체나 분열을 야기하지는 않았고, 또한 이 내부 경쟁은 보다 시장지향적 개혁을 주장하던 분파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계 집단들은 자유화의 과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자유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말레이계 중산층은 경제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날 국가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 것인지, 특히 '신경제정책' 기간 동안에 경제·사회적으로 말레이계 인구들에 주어졌던 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었다(Chin, 2000: 1046). 이런 상황 속에서 말레이시아의 국가 지배 엘리트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재편과 정치적 개혁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이전의 국가 개입적 조절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사회 질서를 불안정화시키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주도 발전의 특수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초국적 자본을 소외시키

2) 이러한 말레이시아 집권 세력의 내부 분열은 경제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내외적 압력과 지배 세력의 정치적 기반인 말레이계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 사이의 긴장이 표출된 것이었다.

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두 가지 상이한 선택 사이의 좁다란 길을 찾아야만 했다(Chin, 2000: 1045).

이러한 협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인데, 이는 국가의 발전주의적 개입과 시장 지향적 구조조정이 혼합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1년 이전의 ‘신경제정책’을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개발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이 이전보다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신경제정책’의 기본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마하티르는 ‘비전 2020(Vision 2020)’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를 2020년까지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공언하였다(Bunnell, 2002a: 292). 즉, 국가의 발전주의적 개입의 지속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지향적 구조 조정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간 부문을 ‘성장의 기본적 동력’이라고 묘사하면서 ‘경제적 자유화’와 ‘기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의 필요를 재천명하였다(Bunnell, 2004: 52).

이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간 선택적 자유화’라는 공간적 기술을 동원하여 기존 발전주의 국가로부터 전해져 온 제도-사회적 구성과 새로이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 사이의 긴장을 매개하려고 하였다. 즉, 전 국토에서의 전면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특정 공간에 국한하여 자유화와 개방을 추진하는 ‘공간 선택적 세계화’ 전략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MSC 프로젝트이다. ‘멀티미디어 대화량’은 단지 ‘멀티미디어 유토피아’로서 말레이시아를 새로이 등장하는 정보화 경제와 사회로 접속시키는 수단으로 기획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조절적·하부구조적 환경이 제공되는 ‘기업 유토피아’로서 건설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적인 조절의 공간에서는 여전히 대규모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초국적 자본을 소외시키지 않고 끌어들이기 위해 훨씬 더 자유화된 조절적 규칙이 영역적으로 국한된 채 적용되는

신자유주의의 요충지로서 '멀티미디어 회랑'이 건설된 것이었다.

이러한 '공간 선택적 세계화' 전략의 사용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멀티미디어 회랑지역'을 세계화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a test bed)'라고 묘사하였다(Bunnell, 2002a). 이와 관련하여 마하티르가 한 다음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계로 향해 가고 있고, 따라서 매우 빠르고 어마어마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실행하기에 앞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실험해 봄을 통해 엄청난 희생을 야기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MSC는 (말레이시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세계화 프로젝트의) 하나의 시험대와 같은 것입니다(Mahathir, 1998).

여기서 마하티르는 자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비전 2020과 세계화·개방화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과 불안감을 의식하여, 세계화와 개방을 쿠알라룸푸르 일대의 '멀티미디어 회랑지역'에 공간적으로 국한시키는 '공간 선택적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이 방식을 세계화와 개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공간적으로 차단하고, 이 제한된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국가와 사회가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Boey, 2002: 205).

5) 신·구 공간 조절 프로젝트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하지만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이 공간 선택적 자유화 프로젝트는 기존 조절의 공간성과 변증법적인 갈등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한 지역 정책의 기본적 기조는 보다 균

형된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조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인종 기반적 분배 정책과 깊이 관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국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사회적인 노동 분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계 대 촌락에 거주하는 말레이계와 인도계”라는 식으로 특징화되는 인종 집단 간의 공간적 분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분화는 보다 부유하고 도시화된 말레이 반도의 서부 지역과 보다 가난하고 덜 도시화된 말레이 반도의 동부 지역 사이의 지역 간 격차와 연결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공간적 부의 불균등이 서로 섞여서 나타남에 따라, 인종 기반적 분배 정책은 국토 전체에 있어서 보다 균질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정책을 포함하게 되었다(Bunnell, 2004: 45). 따라서, 1970년대부터 산업과 도시의 발전을 국토 전체에 걸쳐서 고무 확산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는 촌락 개발, 뉴타운 건설 등과 같은 정책들로 나타났다(Cleary and Shaw, 1994: 89~90).

이처럼 1970년대부터 지속된 균등 발전 지향의 지역 정책에 반해, ‘멀티미디어 대회랑’ 정책은 뚜렷한 공간적 선택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공 투자와 정보 통신 관련 하부구조의 건설을 말레이시아의 기존 도시 중심인 쿠알라룸푸르 인근의 좁은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공간적 선택성을 지닌 정책적 행위이고, 이는 보다 균등한 국토 발전을 지향하는 기존의 지역 정책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멀티미디어 대회랑’ 건설 사업이 국가의 지역 불균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증가하였다(Boey, 2002). 게다가 MSC 프로젝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보다 심화된 지역불균등의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특히, 야당 지도자들이 국가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보다 보편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전 국토적인 정보네트워크의 확충 보다는 MSC 개발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Lim, 1997). 결국, 전국적 차원에서의 급격한 세계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때문에 채택한 ‘공간 선택적 세계화’는 그것이 가진 ‘공간 선택성’이라는 특성과 말레이시아 근대 국가 형성에서 사용된 균형적 지역개발이라는 전

통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충돌로 인해 또 다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공간 선택적 자유화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나타난 긴장과 갈등은 한국의 경우보다는 훨씬 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경쟁으로 표출되었고, 이는 영역화된 정당 정치의 속성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폭발적인 정치적 동원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로 수도권 지역 바깥에 두 개의 경제자유구역이 더 지정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러한 식의 정치적 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멀티미디어 대회랑' 건설이 말레이시아의 국토 공간의 불균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그와 유사한 특구를 다른 지역에도 건설하지는 정치적 요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균열구조가 기본적으로 인종적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와 달리 영역적 이해나 지역 개발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적 동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 비해 공간 선택적 자유화의 공간성으로 인한 정치적 긴장과 갈등의 정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멀티미디어 대회랑'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긴장들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응은 대부분 담론적이고 상징적인 실천의 형태를 띠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대회랑'이 국토 균형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적 국가주의 담론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대회랑'이 단지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강조하였다(Boey, 2002). 세계화, 정보화하는 21세기에 말레이시아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보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확충해야 하는데, 제한된 자원으로 전 국토에 동시에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기는 어려우니 '멀티미디어 대회랑'과 같은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여 개발하면, 그 개발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전 국토 공간으로 퍼져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Boey, 2002: 204). 즉, 쿠알라룸푸르

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회랑지역’이 말레이시아를 자본, 기술, 정보의 세계적인 흐름의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줄 플러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축적인 상징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종 건물들의 건축에서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멀티미디어 대회랑’ 프로젝트가 단지 ‘글로벌’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문화, 역사적으로 뿌리내려져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6. 결론

이 글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대회랑 사업에 초점을 두어 신자유주의화의 정치화되고 갈등적인 과정이 어떻게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적 상황에서 공간적으로 표현될 것인가를 탐구하려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발전주의 국가 조절의 구 프레임 속에서 성장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반대자들과 반대로 신자유주의화를 옹호하는 세력들 사이에 나타나는 정치적으로 갈등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앞서 이루어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필자는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적 과정과 관련하여 어떤 일반적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국가 주도적 경제 성장으로 널리 알려진 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에 형성된 국가주도 ‘발전주의’적 실천과 이데올로기적 유산과 내외적 다양한 영향과 압력 속에서 국가 지배 엘리트에 의해 추진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젝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긴장과 갈등을 경험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의 지배 엘리트들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의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보다 자유화되고 시장지향적인 조절의 제도와 규칙을 영역적으로 한정된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 전략의 실제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공간 선택적 자유화'와 보다 균등한 지역 발전을 지향하였던 발전주의 국가의 기존 공간 전략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 국가의 제도적·공간적 조직화의 유산과 새롭게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그램 간의 지속적인 사회적·정치적 긴장과 갈등적 상호작용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적 상호작용이 공간 선택적 자유화 전략에 의해 공간적으로 매개됨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 Abstract

A Spatial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n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s: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 and Malaysia

Park, Bae-Gyoon

On the basis of the view emphasizing the contextual embeddedness of neo-liberaliz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neoliberal restructuring processes have actually taken place within the national contexts defined by the path-dependent properties of Asian developmental states. In particular, with empirical focus on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the Multi-media Super Corridor in Malaysia, it explores how the political contestations between inherited institutional and political landscap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emergent neo-liberal restructuring projects can be spatially mediated through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Based on these case studies,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general tendencies in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s with respect to the spatial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Keywords: neoliberalism,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developmental state, path dependency, Korea, Malaysia.

참고문헌

- Bishop, B. 199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The role of the state*. Aldershot, U.K.: Ashgate.
- Boey, Marc. 2002. "(Trans)national Realities and Imaginations: The Business and Politics of Malaysia's Multimedia Super Corridor." T. Bunnell et al.(eds.). *Critical Reflections on Cities in Southeast Asia*, Singapore: Time Academic Press, pp. 185~214.
- Brenner, N. 2003. "'Glocalization' as a State Spatial Strategy: Urban Entrepreneurialism and the New Politics of Uneven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J. Peck and H. W. Yeung(eds.). *Remaking the Global Economy: Economic-Geographical Perspectives*, London: Sage, pp. 197~215.
- Brenner, N. and N. Theodore.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Antipode* 34(3), pp. 349~379.
- Bunnell, T. 2002a. "Cities for Nations? Examining the City-Nation-State Relation in Information Age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6(2), pp. 284~298.
- _____. 2002b. "Multimedia Utopia? A Geographical Critique of High-Tech Development in Malaysia's Multimedia Super Corridor." *Antipode* 34(2), pp. 265~295.
- _____. 2004. *Malaysia, Modernity and the Multimedia Super Corridor: A Critical Geography of Intelligent Landscapes*. London: Routledge.
- Chang, H. J. 1998. "Korea: the misunderstood crisis." *World Development* 26, pp. 1555~1561.
- Chin, Christine B. N. 2000. "The state of the 'state' in globalization: social order and economic restructuring in Malaysia." *Third World Quarterly* 21(6), pp. 1035~1057.
- Cleary, Mark and Brian Shaw. 1994. "Ethnicity, Development and the New Economic Policy: The Experience of Malaysia, 1971~1990." *Pacific Viewpoint* 35(1), pp. 83~106.
-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Harmondsworth: Penguin.
- Jessop, B. 1994. "Post-Fordism and the state." A. Amin(ed.). *Post-Fordism: a reader*, Oxford: Blackwell, pp. 251~279.
- Jomo, K. S. 1995. "Introduction." K. S. Jomo(ed.). *Privatizing Malaysia: Rents, Rhetoric, Realities*. Oxford: Westview Press.
- MacLeod, G. 2001. "New Regionalism Reconsidered: Globalization and the Remaking of Political Economic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4), pp. 804~829.

- Mahathir, Mohamad. 1998. *Excerpts From the Speeches of Mahathir Mohamad on the Multimedia Super Corridor*. Kuala Lumpur: Pelanduk.
- Peck, J. and A. Tickell. 2002. "Neoliberalizing Space." *Antipode* 34(3), pp. 380~404.
- Pirie, I. 2005. "The New Korean State." *New Political Economy* 10(1), pp. 25~42.
- Sack, Robert D. 1983. "Human Territoriality: A Theor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3(1), pp. 55~74.
- Salleh, G. 2000. *Urb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Malaysia*. Kuala Lumpur: Utusan Publications.
- Swyngedouw, E. 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c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K. Cox(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New York: Guilford.
- Tickell, A. and J. Peck. 2003. "Making Global Rules: Globalization Or Neoliberalization?." J. Peck and W. Henry Yeung(eds.), *Remaking the Global Economy: Economic-Geographical Perspectives*, London: Sage, pp. 163~181.
- Weiss, L. 2003. "Guiding globalization in East Asia: new roles for old developmental states." L. Weiss(ed.),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Bringing Domestic Institutions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5~270.
- Korea Herald*. 2002. "Korea's New Vision: Hub plan need to focus on logist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